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18
----------	------

2016년 2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2월 11일, 한명희 대표발의(발의자 48명)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2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한명희 의원)

### 1. 제안이유

-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타결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음.
- 이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어디에도 없고, 우리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정부에서 10억엔을 주겠다는 것이며, 일본의 무성 홈페이지와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10억엔만 제출하

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세계 평화와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정부가 일본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함.
-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이 합의에 대한 파기를 주장하고 있고,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정부 관계자들의 계속되는 망언에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난제 중의 난제’를 양국이 결단을 통해서 타결한 아주 귀중한 합의”라고 일축하고 있음.
-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합의는 그 내용은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로 진행된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합의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진행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2. 주문

-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를 타결하고 발표한 바 있음. 이 합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한다는 애매한 표현과 배상이 아닌 보상형태로 10억엔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것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하였음.
- 또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세계평화와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과 피해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성금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까지 약속하였음.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들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외교부장관,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1 개요

- 한명희 의원 등 48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은,
  - 지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외교부장관)과 일본(외무대신)간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은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양국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 결의안의 타당성 검토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하여, 일제는 식민지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해 왔음.

- 아울러, 그동안 일본의 일부 정치인 및 사회 저명인사들이 위안부를 비하하는 망언과 망동을 계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배가되어 왔던 측면이 있음.
-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2010년 8월 13일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촉구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도의적 책임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며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도 2013년 5월 UN고문방지위원회의 결의문 등<sup>1)</sup>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및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음.
-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체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당사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동안 일본에 요구해 온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무시한 조치라는 점에서, 본 결의안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1) 일본위안부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동향

- 2013년, UN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 2007년, 미국 하원 및 유럽의회, 네델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본의 공식 사죄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함
- 1996년, UN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성 위반이며,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죄 및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를 타결하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합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한다는 애매한 표현과 배상이 아닌 보상형태로 10억엔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것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세계평화와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과 피해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성금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어디에도 없고, 우리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정부에서 10억엔을 주겠다는 것이며,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와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10억엔만 제출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 게다가, 협상 과정에서 사라진 피해자, 협상 결과를 강요받는 피해자가 있는 합의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이 합의에 대한 파기를 주장하고

있고,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정부 관계자들의 망언이 계속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난제 중의 난제’를 양국이 결단을 통해서 타결한 아주 귀중한 합의”라고 일축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또 다시 짓밟는 행태가 지속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한일 위안부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짠 소리·짠 짓을 거듭하는 일본에 대해 단호하고 명쾌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저들의 야비한 장난질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자, 나아가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하여,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의 파기를 위해 행동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세계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인권과 존중의식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